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진화과정에 대한 고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까지

박후진(경남대학교)

북한은 경제건설에서 자원부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인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체계’를 도입한다. 그러나 국가의 투자를 중공업에 집중하는 ‘중공업우선’ 전략이 지속되면서 자원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경제건설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독립채산제에 바탕을 둔 연합기업소를 산업전반에 도입하였으며 소위 ‘경공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경공업활성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대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고난의 행군’ 기간 중 북한의 경제운영체제는 일대 변화를 겪게 되며 ‘고난의 행군’ 이후 이것은 북한식 독특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재정립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기업책임제’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제’에서 북한의 기업체는 자본주의 일반 기업과 유사한 동기와 경영전략을 갖고 있으나 기업체는 기업체안의 조직되어 있는 기업체당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이 제도화된 지도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서 영리를 주목적으로 자유방임의 틀에서 운영되는 기업과는 구분이 되며 여전히 집단주의의 틀에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경남대학교 연구년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다.

1.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는 가장 강도가 높은 중앙집권적 계획명령경제(Centrally Planned Command Economy)로 알려져 왔다. 사상 유례가 없는 심각한 경제위기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배급체계(Public Distribution System)가 붕괴되면서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명령체제역시 유명무실화되었고, 북한은 체제수호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군(軍)에 집중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생겨난 시장(장마당)에 기생하면서 근근이 연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18년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 간의 역사적 판문점 회담을 통해 알려진 ‘려명거리’와 ‘마식령스키장’ 그리고 평양시민들의 모습 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모습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져서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함께 밀고 나가는 병진노선을 끝내고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해 남북관계개선과 나아가 북미관계정상화에 나서고 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는 경제제재가 가속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성장하고 있으며¹⁾, 북한은 소위 ‘수입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산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김철 소장의 토로²⁾에서도 알

1) 심새롬, “대북 제재에도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3.9%로 17년 만에 최고,” 『중앙일보』, 2017년 7월 21일. <http://news.joins.com/article/21777887>.

수 있듯이 북한의 경제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를 이미 오래전에 넘기고 호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경제위기에 처하기 이전의 경제구조와 체계에서 그 경제위기를 초래한 요인들이 제거되거나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경제구조와 운영 체계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이전의 것과는 다르게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이러한 구조와 체계의 변화를 대변한다. 이 글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의 말과 글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진화과정을 고찰하려고 한다. 유일지도체제하에서의 북한 최고지도자(들)이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가진 담화, 회의에서 한 연설과 결론 그리고 현지지도에서 한 지시는 곧 당과 국가의 지시와 정책이 되고 또 그것들이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 등을 담고 있어 북한의 경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들이다. 『조선중앙연감』은 매년 북한 최고지도자(들)의 주요 행적과 언행을 담고 있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요 말과 글은 각각 『김일성저작집』과 『김정일선집』에 기록되어 있으며 김정일의 담화,

2)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국내에서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원료, 자재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도 외화가 있으면 외국제품을 사들일수 있으니 기업체들이 외화벌이부문을 늘였다. 원료, 자재를 쉽게 조달하려고 한 결과 외국제품이 더 많아졌다. 말그대로 수입병에 걸린것이다. 지금 일고있는 국산화바람은 비정상상의 정상화이다. ... (중략)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것 이외에도 기업들사이에 호상주문하여 계약을 맺고 그것을 리행하게 되어있다. 이 과정에도 소득이 생긴다. 말하자면 적대국들이 제재를 가하면 가할수록 국산제품을 새로 만들어내는 기업들간의 거래가 늘어나 사회순소득이 불어나는 구조로 되어있는것이다. 김지영, “〈인터뷰〉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김철소장: 조선이 쇠퇴가 아닌 상승의 길을 걷는 리유,” 『조선신보』, 2018년 1월 5일. <http://chosonsinbo.com/2018/01/27suk-8/>.

연설, 결론들의 대부분은 『로동신문』을 통해 보도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중앙연감』(1992~2016년), 『김일성저작집』(1~44권), 『김정일선집』(1~25권), 그리고 『로동신문』(2012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을 활용하여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까지의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진화과정을 고찰, 분석하였다.

2.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의 성립과 이완 그리고 연합기업소 체계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 발전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 발전’(이하 중공업우선 전략)이라는 발전전략을 갖고 경제건설을 하여왔다. 중공업우선 전략은 1953년 8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는데 김일성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전후경제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복구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할 수 있고 인민생활을 빨리 개선할 수 있습니다.”³⁾ 즉 자립적 경제기반을 갖기 위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력 증대의 필수적인 생산재를 만들어 경공업과 농업도 함께 발전시켰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중공업우선 전략은 초기에는 엄청난 성과를 내었다. 중공업

3)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3년 8월 5일),” 『김일성저작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8쪽.

우선 전략이 기본 경제발전 전략으로 채택된 이후 북한은 전후 3개년 계획(1954~1956년)시기에 공업생산 성장률은 연평균 41.7%에 이르러 전후 공업부문에 대한 복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며 알곡도 287만 톤 생산함으로써 전쟁 전 수준을 넘어섰다고 한다.⁴⁾ 문제는 제1차7개년계획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은 제1차7개년계획기간(1961~1970년) 중 안보위기를 느끼고 경제와 국방을 함께 발전시키자는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국방부문에 투자를 더 늘려 국방을 강화하지는 병진노선은 결국 국방건설에 토대라 할 수 있는 중공업에 투자를 더 늘리자는 노선으로서 다른 부문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⁵⁾

이렇듯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군사부문(중공업)에 배분한 병진노선은 필연적으로 북한에서 자원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은 1964년 3월 내각 결정으로 ‘계획의 일원화’체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데, 이것을 통해 당적지도와 통제를 ‘대안의 사업체계’ 틀에서 강화하여 계획 수립에 있어 당의 통일적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개별 공장·기업소들의 조직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낭비를 최소화 하고⁶⁾ 생산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의 경제

4) 김일성, “3개년인민경제계획실행총화를 잘할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3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7년 4월 6일),” 『김일성저작집』, 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00쪽.

5) 1963년 경공업에 대한 투자는 절대 액 기준으로 1962년에 비해 약 60% 줄었으며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 70%에서 1963년 86.3%로 급등하였고 이후에도 80% 이상을 상회하였다: 1964년 73.8%, 1965 87.3%, 1966년 85.7%, 1970년 88.8%.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서울: 통일원, 1986), 172쪽.

6) “일원화체계에 속한 각급 계획위원회들은 해당 지방과 부문에서 계획을 옹기 세웠는가 잘못 세웠는가 하는 것을 늘 살펴보며 온갖 예비를 찾아내고 객관성을 가진 과학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생산기관들을 도와주며 생산조직을 잘하지 못하거나 로력과 자재를 낭비하는 온갖 현상을 제때에 웃기관과 내각에 통보하여

운영에서 중앙집권적 계획체제는 생산 활동의 모든 지표들을 국가 계획안에 포괄하여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세밀하게 서로 맞물리도록 하는 ‘계획의 세부화’체제를 1965년 9월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중앙집권적 계획체제 안에서 공장과 기업소와 같은 집단적 차원이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에서도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물질적 동기(material incentive)는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대했던 효과를 현실에서 내지 못하였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병진노선에 의해 중공업에 대한 편파적인 투자가 더욱 심화되면서 생산재생산의 과잉을 그리고 소비재생산의 부족현상을 야기해 소위 ‘축적과 분배(accumulation and distribution)’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북한 근로자들과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다.⁷⁾ 이렇듯 북한에서 ‘축적과 분배’의 균형문제는 항시적인 것이 되었으며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체제에 바탕을 둔 중앙집권적 계획체제는 더욱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64년 12월 19일),” 『김일성저작집』, 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510쪽.

7) “오늘 우리나라의 전반적공업토대는 공업국가의 수준에 올라섰으나 인민생활은 아직 높지 못하며 중공업의 발전에 비하여 경공업은 뒤떨어져있습니다. … (중략) … 다 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적과 소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의 균형을 옹계 맞추는 것입니다. 만일 이 균형을 옹계 맞추지 않으면 확대재산을 끊임없이 실현할 수 없으며 인민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일수 없습니다.” 김일성,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한 연설(1970년 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2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1쪽.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를 갖고 여기서 김일성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내놓는다.⁸⁾ 가까운 미래에 연간 일천억 킬로와트의 전력, 일억이천만 톤의 석탄, 천오백만 톤의 강철, 이천만 톤의 시멘트, 칠백만 톤의 화학 비료와 천오백만 톤의 알곡 등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10대전망목표’는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으며 ‘축적과 분배’의 균형문제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고 북한경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10대전망목표’는 제2차7개년계획(1978~1984년) 기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10대전망목표’는 김일성의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김일성은 1985년 신년사에서 제2차7개년계획에 대한 총화도 거른 채 ‘80년대속도’ 창조운동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고 농업 근로자들이 “1,000만톤의 알곡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다”⁹⁾라고 짙막하게 경제건설에 대해 언급하였다. 결국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8)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80년 10월 10일),” 『김일성저작집』, 3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332~333쪽.

9) 김일성, “신년사(1985년 1월 1일),” 『김일성저작집』, 3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7쪽. 김일성은 제2차7개년계획기간(1978~1984년) 중 유일한 성과로 알곡 1,000만 톤 생산을 들었지만, 김일성의 이후 발언들을 분석하여 보면 1984년 말까지도(그리고 이후 한번도) 북한의 알곡 생산은 1,000만 톤에 이르지 못하였다. 김일성은 제2차7개년계획이 끝난 지가 6년 후인 1990년 5월 28일 정무원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집약화 수준을 높이면 지금 있는 부침땅을 가지고서도 알곡 1,000만톤을 능히 생산할수 있습니다. 알곡 1,000만톤 생산하면 식량을 내놓고 집짐승먹이로 300만톤을 돌리고도 많은 예비량곡을 저축할수있습니다. 올해에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제9기 제1차회의, 정무원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1990년 5월 28일), 『김일성저작집』, 4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332쪽.

김일성은 1984년 12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국가계획위원회가 주관주의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워 아래에 내려 보내 인민경제계획이 원만히 수행되지 못하였다면서 국가계획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현 단계 경제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전력생산의 정상화와 함께 경공업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것은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중략)…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관리를 개선하며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 문제와 밀접히 련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돈을 벌면 그것으로 상점에서 아무 물건이나 마음대로 살수 있게 되어야 물질적관심성을 가질수 있습니다. …(중략)… 지금 상점들에 천도 얼마 없으며 좋은 물건도 적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당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불편한점이 좀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¹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김일성도 근로자들의 물질적 동기를 높이는 것이 북한의 경제건설의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근로자들이 물질적 동기가 담보될 수 있는 체제로 독립채산제¹¹⁾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김일성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공장, 기업소들에 생활필수품 직장과 작업반들이 나오게 하고 농촌과

10)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84년 12월 10일),” 『김일성저작집』, 38권, 397~398쪽.

11) 독립채산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통제 밑에 기업소가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해 나가면서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 관리운영방법이다. 한인호,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기업소창발성의 옳은 결합,” 『근로자』, 5호(1986), 47쪽.

가두(街頭) 인민반들에 부업반과 가내작업반을 많이 꾸려 인민소비품의 가지 수와 양을 늘리며 편의봉사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그는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교시한다.

내 생각에는 생활필수품 직장과 작업반,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한 1만 개 새로 조직하는 운동을 벌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중략) ... 지금 우리 나라에 협동농장이 한 3,000개 있는데 농장마다 부업반을 하나씩 조직하여도 3,000개나 됩니다. 부업반을 협동농장마다 1개씩 내오고 군소재지들에 여러가지 부업반을 조직하면 부업반이 작은 군에는 한 30개, 큰 군에는 50~60개씩 될것입니다. ... (중략) ... 군마다 부업반을 50개씩 내오면 농민시장이 흥성거리게 될것이며 1~2년사이에 지방예산수입이 쑥 늘어나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이 한계단 높아지게 될것입니다.¹²⁾

김일성이 위의 발언들은 단순한 교시(敎示) 아니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져야 할 당 중앙의 명령이 되었다. 이 명령에 의하여 향후 북한의 경제체계는 ‘계획의 일원화 그리고 세부화’ 체계로 대변되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서 각 부문 또는 연관기업소들 간의 내부시장을 갖고 계약을 위주로 자재조달과 생산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적 분배를 바탕으로 하는 연합기업소체제로 바뀐다. 그리고 계획 이외에 범주에서 부산물과 유휴 노동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1983년 8월 3일 김정일이 발기한 인민소비품 증산운동은 이에 더욱 탄력을 받아 확산되고 농민시장은 그 원래 범위를 넘어서 인민들의 소비품의 많은 부분의

12)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84년 12월 10일),” 401쪽.

수·공급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다.

김일성은 독립채산제를 올바로 시행하여 생산의 정상화를 주문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0차 전원회의가 끝나고 약 1년 후인 1985년 1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197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 연합기업소를 공업전반에 도입할 것을 주문한다. 김일성은 정무원의 지도 밑에 연합기업소를 두고 정무원은 연합기업소를 지도하고 연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연합기업소(母體)기업과 연합기업소 아래에 있는 다른 기업소들(子)기업들을 지도하게 하여¹³⁾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계획에서 규모와 범위(scale and scope)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연합기업소체계를 전면적으로 내올 것을 주문하기 약 1년 전 김일성은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경공업혁명, 봉사혁명을 거론하고 그것들이 실현되도록 주문하였다. 김일성이 주문한 경공업혁명과 봉사혁명은 1983년부터 진행되었던 8월 3일 인민소비품증산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북한에서 경제와 행정의 말단 그리고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군(郡)에서도 여러 종류의 분공장들과 수많은 생활필수품 직장, 그리고 가내작업반 및 부업반 등이 조직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합적으로 지칭하여 ‘지방산업공장’으로 하는데 지방산업공장은 원래부터 중앙의 통제아래 있던 계획

13) 여기서 지도한다는 의미는 연합기업소가 국가계획위원회의 지도아래 계획을 자체로 세우고 망라된 산하 공장·기업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지며 필요에 따라 국가계획에 기초하여 조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 기업소들과 경제거래를 진행한다는 의미이다(김철식,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기업소조직의 새로운 형태,” 『근로자』, 2호(1985), 71쪽). 이것은 계획화사업이 최종적으로 국가계획기관에서 결정되는 명령적(command) 성격이 내재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체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화 부문이 아니었다.¹⁴⁾ 생산과정에서 남는 부산물과 유휴 자원과 노동으로 운영되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 역시 계획 밖에 있었다.

김일성은 당에서 제시한 경제건설목표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달성하여야 한다는 의지를 표방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강조한 것은 대외무역을 통해 경제건설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원료와 자재 그리고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의지는 이미 제1차7개년계획부터 표명되었으며¹⁶⁾ 김일성은 대외무역을 늘이고 잘

14) “지금 우리나라에 지방산업공장들이 몇천개 있는데 그 많은 공장들을 다 중앙에서 지도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날 적지 않은 지방산업공장들을 중앙공업에 넘기고 중앙에서 직접 지도해보았지만 지방에서 지도하던 때보다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공업생산액이 가장 높았던 때는 창성연석회의를 전후하여 지방에서 지방공업을 지도하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지방공업을 성에서 지도하게 된 다음부터 생산액이 푹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체에서 지방공업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주며 지방공업발전에서 지방의 창발성이 최대한으로 발양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김일성,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한 연설(1970년 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2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76쪽.

15)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과 세계경제발전추세는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부문구조가 매우 복잡해졌으며 그 기술장비수준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보니 인민경제 부문들에서 요구하는 원료와 자재의 가치수가 다종다양하며 그 량도 대단히 많습니다. 대외무역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원료와 자재에 대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요를 제대로 보장할수 없습니다.” 김일성,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무역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84년 2월 13일),” 『김일성저작집』, 38권, 233쪽.

16) “7개년계획에 예견된 외화를 벌자면 지금보다 2배나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비하면 많은 수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튼튼한 공업토대를 가진 나라에서는 웅당 이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야 합니다.” 김일성, “무역일군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대외무역에서 자주성을 튼튼히 견지할데 대하여: 무역성당총회에서 한 결론(1965년 1월 28일),” 『김일성저작집』, 1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32~133쪽.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案)들까지 제시하면서까지 대외무역을 늘여¹⁷⁾ 공장과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하려고 하였다. 김일성의 이러한 대외무역에 대한 관심으로 북한에서는 이미 1970년부터 도(道)마다 수출입상사를 가지고 외국과 무역을 하고 있었으며¹⁸⁾, 정무원 위원회와 부(部)들에게도 대외무역이 허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번 외화를 가지고 자신들의 산하 공장과 기업소들이 필요한 것들을 정무원, 국가계획위원회 그리고 무역부의 간섭 없이 사다 쓸 수 있었다.¹⁹⁾ 이러한 무역에 관한 권한은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연합기업소에게도 적용되었다. 연합기업소는 정무원의 통제 아래서 외국과의 무역을 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 번 외화의 일정한 몫은 외국에서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었다.²⁰⁾

북한은 제2차7개년계획이 끝나자 2년간(1985~1986) 완충기를 갖고

-
- 17) 김일성은 '무역혁명'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무역사업에서도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경공업혁명을 하려면 무역혁명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연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한 연설(1985년 11월 19일)," 『김일성저작집』, 39권, 251쪽.
- 18) 단 이들 수출입상사는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소비품만 취급할 수 있었으며 다른 나라와의 연계를 가질 때에는 반드시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김일성,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한 연설(1970년 2월 27일)," 『김일성저작집』, 2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60쪽.
- 19) 김일성, "경공업을 발전시키며 인민봉사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경공업부문과 인민봉사부문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1979년 11월 3일)," 『김일성저작집』, 3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446쪽.
- 20) "연합기업소관리운영규정 제40조 2항에서 기관, 기업소에서 자기가 번 외화의 일정한 몫으로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물자를 사다 쓸 수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두고 다른것은 다 빼야 하겠습니까." 김일성, "연합기업소를 조직하며 정무원의 사업 체계와 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한 연설(1985년 11월 19일)," 『김일성저작집』, 39권, 238쪽.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제3차7개년계획에 들어간다. 북한은 제3차7개년계획의 기본 과업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공업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 계획기간에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생산은 1.4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계획목표를 설정하였다.²¹⁾

주지하다시피 제3차7개년계획기간 동안 소련이 몰락하고 동구 사회주의경제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의 계획은 수포(水泡)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약 10년이란 기간 동안 공업전반을 연합기업소체계로 꾸리고 경공업과 무역을 다각적으로 그리고 다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북한의 경제의 구조와 체계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Centrally Planned Economy Regime)에서 탈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3. 고난의 행군과 연합기업소체계의 재정립과 재가동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자, 국가총수입은 절반이하로 줄어들고 배급체계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게 되자 북한경제에서 중앙집권적 성격은 더욱 약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정일은 다시 사상에 우위를 둔 ‘선군정치’와 과학기술에 국가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북한이 맞은 초유의 위기에 대응하였다. 김정일

21)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1986년 12월 30일),” 『김일성저작집』, 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223쪽

이 북한의 방위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고 ‘선군정치’를 전면으로 내놓을 무렵 사회주의원칙을 지키고 최대한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에 경제건설(재건)의 방향성 맞추어지면서 연합기업소체제는 2001년 중반부터 재가동 되었다.

연합기업소체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중 일시적으로 폐지되고 성(省)에서 관리국을 두고 공장과 기업소들을 관리하고 있었다.²²⁾ 북한문헌에서 연합기업소체제가 관리국체제로 바뀐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경제가 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거나 가로타는 현상’이 만연되면서²³⁾ 소위 비사회주

22) 이것은 김정일의 다음의 발언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지난해 국가기구체계를 개편하면서 연합기업소들을 없애고 성들에서 관리국을 내왔는데 연합기업소체제가 좋은가, 관리국체제가 좋은가 하는것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실시 어느 체제가 좋은가 하는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연합기업소들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소속되어있는 공장, 기업소들이 연합기업소당조직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으며 생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국체제로 넘어간 다음부터 연합기업소가 하던 사업을 관리국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김정일, “중공업부문들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며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 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주체89(2000)년 5월 12일), 『김정일선집』, 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201쪽.

23) 김정일의 다음 지적에서 이런 현상이 당 간부들에게서조차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음을 감지하고 있다.
 “최근 당중앙위원회 일부 일군들속에서 경제문제를 푼다고 하면서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는데 그러서는 안됩니다 … (중략) … 당일군들이 행정대행을 하면 결국 당사업도 행정경제사업도 다 잘될수 없습니다. … (중략) … 당일군들이 행정을 대행하면서 경제실무에 맡겨들다보니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놓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외곡집행되여도 투쟁의 날을 세우지 못하며 자본주의적요소, 이색적인 바람이 들어오는것도 가려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당일군들은 절대로 행정대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중략) …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집행을 장악통제하고

의적 행위와 행태를 양성하는 온상과도 같았던 연합기업소는 김정일의 눈에는 중앙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체계로 비추어 졌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연합기업소 체계는 해체되고 성의 관리국에서 공장과 기업소를 관리하는 체계로 바꾸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흔들리던 당 조직들도 사상을 우위에 둔 ‘선군정치’의 틀에서 관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연합기업소당위원회를 다시 제자리에 놓을 수 있게 되었고 경제건설의 방향성이 ‘선군정치’의 틀에서 설정되면서 연합기업소체계역시 재가동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재가동된 연합기업소체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체계와는 달랐다. 먼저 ‘실리’가 강조되면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었는데 이제는 연합기업소 모체기업소뿐만 아니라 연합기업소 내의 모든 공장과 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2중 독립채산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연합기업소 내의 자재의 수·공급은 연합기업소 내의 기업 간의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연합기업소 내의 시장, 즉 내부 시장(intra-industry market)을 통해 자원이 배분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연합기업소 간의 자재 수·공급도 연합기업소가 직접 자체의 자재 상사를 통해서 하고, 자기 기업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자재는 다른 연합기업소,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였다.²⁴⁾ 즉 연합기업소체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그와 어긋나는 온갖 비당적,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주체86(1997)년 9월 27일], 『김정일선집』, 1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205~206쪽.

24) 김정일은 연합기업소체계를 재가동하는 것에 대해 교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였다.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조건에서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이 서로 유류상통할수 있는 제도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기때문에 못 한개도

계에서는 공장과 기업소들의 자재의 수·공급이 필요여하에 따라 내부 시장 또는 기업 간의 시장(inter-industry market)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었다.²⁵⁾

독립채산제의 강화는 또한 ‘변수입’지표라는 새로 실행된 국가납부 체계에서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 ‘변수입’은 기업소의 생산물 가운데서 새로 만들어진 것을 판매하여 얻은 화폐수입으로 정의되는데, 이 화폐 수입은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와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변수입’지표는 2002년 7월 1일 경제개선조치가 취해지면서 함께 실행되었는데 ‘변수입’분배에서 ‘변수입’에 의한 국가납부를 우선적으로 보장한 이후에 기업소가 쓸 몫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국가에 대한 의무가 실질적으로 높아진 것이었다.²⁶⁾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소와 근로자들의 물질적

국가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움직이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여가지고서는 경제관리를 바로 해나갈수 없습니다 ... (중략) ... 공장, 기업소들사이에 서로 교류할수 있도록 사회주의적인 교류시장 같은것을 조직하여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김정일, “중공업부문들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며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주체89(2000)년 5월 12일),” 201쪽.

- 25)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당시 북한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도가 높거나 전략적 의미를 갖는 공장과 기업소들은 국가계획에서 자재를 우선적으로 수·공급받았기 때문에 굳이 사회주의교류시장과 같은 시장을 이용하여 자재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당시 시장이 허용된 것은 계획의 공백을 메우고 계획을 보조하기 위해서이었던지 계획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점은 다음 김정일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국영기업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을 보조적인 공간으로 리용하여 공백을 메꾸는 방향에서 국영기업과 시장을 옹계 결합시켜나아가 합니다.” 김정일, “현시기 당사업과 경제사업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내각책임일군들앞에서 한 연설(주체94(2005)년 1월 9일), 『김정일선집』, 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215쪽.

인 동기도 ‘번수입’지표체계에서 높아지게 되었는데 자체충당금의 몫과 종업원의 생활비 몫도 ‘번수입’ 계획수행률에 따라, 즉 일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주의분배원칙²⁷⁾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실리’도 또 그것을 실현시키는 ‘시장’도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 또 그 틀에서 추구되도록 하여 국가통제의 배제가 전제되고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이 시장(market)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화와는 확실한 구분을 두었던 것이다.

다시 재가동된 연합기업소 체계에서는 ‘후방공급’이 이전에 비해 더욱 강조되었는데 ‘후방공급’은 단순히 종업원들의 후생과 복지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농사도 짓고 돼지 또는 오리공장과 같은 목장도 운영하고 식료품가공공장도 가동하여 종업원들에게 식량과 부식물 등을 제공하는 역할과 임무도 부여받게 되었다.

검덕광산 당위위원회에서는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대로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화를 주고 무엇을 사다먹일 생각만 하지 말고 부업농목장을 잘운영하여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해야 합니다. 부업농목장에서 콩과 강냉이도 심고 짐짐승도 많이 길러 광부들에게 간장, 된장과 고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²⁸⁾

26) 장성은, “공장, 기업소에서 번수입의 본질과 그 분배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경제연구』, 4호(2002), 36쪽.

27) 리영근,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번수입을 늘이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1호(2003), 43쪽.

28) 김정일, “새 세기 요구에 맞게 함경남도의 경제사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하여[함경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 91(2002)년 6월 4~5일, 7일],” 『김정일선집』, 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위의 김정일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근로자들의 후방공급 사업을 책임지는 것은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당위원회이다. 후방공급사업은 국가의 도움 없이 기업소 자체로 하는 것이다. ‘번수입’지표체계의 틀에서 설명하자면, 기업 순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떼어서 국가에 먼저 바치는 ‘국가기업리득금’을 내고 남은 것, 즉 ‘자체충당금’에서 일정부분을 떼어 후방공급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후방사업의 관장은 연합기업소당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국가(당)가 ‘후방공급사업’을 하는 것과 같다.

국가(당)에서 이렇게 후방사업을 강화하여 연합기업소 자체적으로 식량공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혁명적군인정신’²⁹⁾과 ‘강계정신’³⁰⁾이었다. 자력갱생의 실증인 ‘혁명적군인정신’과 ‘강계정신’은 ‘사상’을 우위를 놓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연합기업소체계의 가동이 다시

2013), 223쪽.

- 29) 최고사령관의 지시와 명령을 무조건 따르며 수행해 나아가는 사업태도를 의미하는데 김정일은 ‘혁명적군인정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입니다. 인민군인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집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각오로 투쟁하기때문에 최고사령관이 주는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무조건 집행하고아머는것입니다.” 김정일, “고난의 행군 최후돌격전을 더욱 힘차게 벌리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7년 6월 21일), 『김정일선집』, 1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155쪽.
- 30)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다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자강도 강계시에서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필요 전력을 스스로 자급하며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였으며, 이 경험은 김정일의 자력갱생노선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여 김정일이 자신의 노선을 고수하고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추동력이 되었다고 한다. 이 모범사례를 김정일은 ‘강계정신’이라고 명명하였으며 ‘혁명적군인정신’과 더불어 모든 단체와 단위에서 따라 배워 ‘고난의 행군’을 자력갱생으로 극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루어지게 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었다. 그런데 북한은 2014년 ‘사회주의기업책임제’라는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는 ‘고난의 행군’ 이후 변화된 북한경제운영체계를 담고 있는 핵심어(keyword)이다. 여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³¹⁾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이 채택된 2013년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기존의 경제관리체계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였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중략) ...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밑에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

31)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 경제 체제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총론적으로 북한에서 계획, 생산, 그리고 분배, 전 과정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며 각론적으로는 가령, 생산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재정·금융 제도에서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각기업체가 자신의 생산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추진되면서 금융의 기능이 확대되고 재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면 그리고 자료의 한계로 ‘사회주의기업책임제’가 실시되면서 이에 따른 재정·금융제도의 변화와 같은 각론적 사항에 대한 논의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못했으나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나감으로써 생산자대중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사회주의기업관리방법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³²⁾

이 ‘사회주의기업관리방법’은 약 1년 후 김정은의 2014년 5월30일 담화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명명지어진다. 김정은이 2014년 5월30일에 한 담화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해설한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김영홍 교수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³³⁾라는 글을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한 것도 아니며 다른 나라들에서 해본 경험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경제관리방법도 아닌 명실 공히 북한의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창조한 북한식의 경제관리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이것은 김정은 시대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대에 이미 나와 있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리와 생산과 관리에서 책임제를 강화할 데 대한 사상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실천에 구현한 과학적인 기업관리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추진되고 있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김일성과 김정일시대에 추진, 가동되었던 연합기업소 체계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는 기업소들이 갖는 경영상

3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로동신문』, 2013년 4월 1일.

33) 김영홍(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016년 11월 4일. <http://www.ryongnamsan.edu.kp/univ/success/social/part/814>

의 상대적 독자성이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전의 연합기업소체계에서는 거시적 계획은 국가에서 세우고 미시적 계획은 연합기업소 자체에서 세워 연합기업소 내에 있는 사회주의교류시장을 통해 자재를 수·공급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 권한이 확대되어 모든 공장, 기업소, 그리고 협동단체들(이하 기업체)이 자체로 세운 경영전략에 기초하여 다른 모든 기업체들과 계약과 주문계약을 맺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들을 구입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고 확대재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연합기업소체계는 해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가능한 범위에서 대외경제활동을 능동적으로 벌려 기업체에서 필요한 원료, 자재, 설비들을 자체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가능한 범위³⁴⁾라고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는 일반 기업체들에게도 자체적으로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무역의 권한이 일반 공장, 기업소, 그리고 협동단체로까지 확대된 것이다.³⁵⁾

세 번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계획지표가운데서도 국가경제발전전략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중앙지표’를 우선적으로 수행한 조건에서 자체의 과학적인 경영전략에 준하여 집행되는 ‘기업체지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34) 가능한 범위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만, 아마도 대외경제성에 사전에 심의와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14년 4월에 열린 최고인민위원회 제13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내각의 무역성과 합영투자위원회 그리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대외경제성’으로 통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외무역업무와 감독이 대외경제성으로 통합되면서 기업소들에 대한 무역 승인과 절차 또한 보다 간소해지고 간편해졌을 것이다.

35) 연합기업소체계에서는 연합기업소 모체기업에게만 무역의 권한이 허용되었다.

변화된 북한경제체제에 대하여 시사 하는바는 매우 크다. 김영홍 교수는 국가계획지표로서 ‘중앙지표’, ‘지방지표,’ 그리고 ‘기업체지표’를 열거하고 있는데 결국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하에서 계획은 위와 세 가지로 나누어진 것이다. 국가에서 국가차원의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한 계획이 기업체에 할당되는 것이 기업체에 할당된 ‘중앙지표’이며, 어느 한 기업체가 기업체 차원에서 다른 기업체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세운 계획이 ‘기업체지표’인 것이다. 그리고 도나 군 차원에서 기업체와 협의해서 세워진 계획은 ‘지방지표’인데 이것은 ‘중앙지표’나 ‘기업체지표’에 비해 비중이 낮은 것이다.³⁶⁾

위에서 분석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핵심은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들과 러시아와 동부 유럽의 구(舊) 사회주의국가들에서 한 것과 같이 시장을 위주(爲主)로 한 개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토대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경제의 개혁과 개방에서 북한만의 독특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기업체지표’는 총론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일반 기업이 연간 계획을 세우고 시장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발견된다. 그것은 바로 모든 기업체가 ‘중앙지표’라는 국가에서 기업체에 할당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점이다. 이 임무는 단순한 임무가 아닌 법적, 지령적 성격을 수반하기 때문에 제도적 상벌(賞罰)의 대상이 된다. 여기

36) 도와 군 자체에서 독자성을 갖고 운영하는 기업체가 북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 군 차원에서 세워진 계획(지방지표)인 경우, 도와 군에서 계획에 해당된 기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기업책임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체의 독립채산제가 더욱 강화되고 경영에 대한 자율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지방정권과 기업체 간의 협의의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아래서 운영되는 기업들과 또 다른 점은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소당위원회 존재의 유무(有無)와 그 역할이다.

기업체에서 당위원회는 여전히 존재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기업체에서 관철시키도록 기업체를 지도하며 기업체에서 당의 정책이 반영된 ‘중앙지표’가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 관리하는 역할과 임무를 맡고 있다.³⁷⁾ 또한 기업체에서 식량과 부식물에 대한 보조뿐 아니라 강성원, 합숙소, 탁아소, 유치원 등의 설립 및 관리와 같은 근로자들의 종합적인 복지를 담보하는 후방공급사업을 관장하는 임무와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계획은 세 가지로 나뉘고 기업체의 상대적 독자성과 권한은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지고 확대되었지만 기업체는 기업체 내의 당위원회의 지도와 관리를 여전히 받게 되는 것이다. 즉, 기업체에 대한 중앙의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지원, 즉 재정적 지원이 줄어들면서³⁸⁾ 기업체 경영에 대한 기업체의 자율성이 높아진 반면, 기업체는 기업체 내에 조직되어 있는 당 위원회의 지도와 관리를 여전히 받기 때문에 기업체들은 각자 자신의 영리적 목적만을 추구할 수 없고 여전히 집단주의(사회주의)틀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37) 이 점은 다음 리명민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 (중략) …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가는것은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리명민,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 『근로자』, 9호(2014), 41쪽.

38) 기업체의 독자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독립채산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독립채산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연성예산 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이 폐지되고 도산과 파산이 허용되지 않지만 일한만큼 가져가는 분배원칙에서 기업체 성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반(半)경성예산계약(semi-hard budget constraint)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수반되는(entailed) 개방(아직은 한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각 기업체에서 자율권을 갖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만들어진 대외경제 공간)은 이미 체제이행을 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개방이 확대되고 심화된다면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의 잠재성(potentiality)을 갖고 있지 않아 외국자본에 대한 지렛대(leverage)가 없는 북한으로서, 경제에서 자본의 논리(logic of capital)를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각 기업체는 생산에 필요한 자원과 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국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며, 이러한 관행(practice)이 지속되고 북한에서 수입품을 대체(代替)할 수 있는 산업이 육성되지 못한다면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하는 자립경제노선은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북한은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이며³⁹⁾ 자립경제노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개혁과 개방의 이점(利點)도 함께 가질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2013년

39)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2013년 3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1년이나 지난 후인 2014년 5월 30일 담화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명명 지어진다. 그런데 5월 30일 담화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아직까지 그 전모가 완성되지 않고 아직 진화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김정은이 5월 30일 담화에서 새로운 사회주의기업관리에 대한 총론적인 기본 골격(basic skeleton)만을 제시하고 각론적으로 살(flesh)이 붙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살을 붙을 수 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조차 김정은의 2014년 5월 30일 담화를 보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중앙당의 승인까지도 필요하다고 한다.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있기 약 2주 전인 3월 18일에 열린 전국경공업대회에서 김정은은 경공업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에게 질 좋은 경공업제품들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 당부한 김정일의 유훈이 아직까지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공업부문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원료, 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을 지적하였다.⁴⁰⁾

김정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 기업소들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잘 짜고 들고 중앙공업공장들이 지방산업공장들을 도와주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도를 제시하였지만 그가 경공업생산 정상화에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경공업부문에서의 현대화와 과학화였다. 결국 경공업의 생산력(productivity)을 발전된 과학기술을 토대로 증대시켜 생산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 즉 경공업에서 발전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수입대체 능력을 제고하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방의 이점 때문에 침식(erosde)될 수 있는 경제에서의 자립노선을 고수,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2014년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이전부터 김정은은 발전된 과학기술을 토대로 경공업의 생산정상화에 경제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⁴¹⁾

4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년 3월 19일.

41) 2015년 경공업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현지도는 모두 23차례나 이루어져 같은 해 8차례만 이루어진 중공업부문에 비해 약 3배 많은 것이었다. 또한 『조선중앙년감』에 따르면 다음 경공업공장들이 김정은의 현지도에 힘입어 개진화와 현대화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대동강타일공장(『조선중앙년감』, 2013, 177쪽), 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기공공장(『조선중앙년감』, 2014, 115쪽), 평양기초식품공장(『조선중앙년감』, 2014, 132쪽), 김익철이 사업하는 일용품공장(『조선중앙년감』, 2014, 187쪽), 조선인민군 제354호 식료공장(『조선중앙년감』, 2014, 200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 경제에서 변혁의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과 개방 모두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되었듯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당을 해체하고 경제에서 정치의 영역을 없애면서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한 러시아와 동부 유럽 구 사회주의국가들의 것과는 전혀 다르며,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고 경제에서만(국가의 통제를 바탕으로) 제한적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 것과는 구별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다른 나라의 것을 모방한 것도 아니며 다른 나라들에서 해본 경험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경제관리 방법이 아닌 북한식의 독특한 경제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전된 과학기술을 토대로 경공업의 생산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북한의 경제정책이 현실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일까? 아직까지 북한문헌들을 통해 이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조선신보의 다음의 보도는 김정은이 2013년 3월 18일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한 연설 이후 경공업분야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전 11시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광복지구상업중심(만경대구역)의 각 매장들은 많은 손님들로 흥성이다. … (중략) … 백화점은 일용품들 중

쪽),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조선중앙년감』, 2015, 80쪽), 갈마식료품공장(『조선중앙년감』, 2015, 142쪽), 10월8일공장(『조선중앙년감』, 2015, 147쪽), 2월20일공장(『조선중앙년감』, 2015, 162쪽), 제534군부대관하 종합식료가공공장(『조선중앙년감』, 2015, 163쪽), 평양시버섯공장(『조선중앙년감』, 2016, 109쪽), 원산구두공장(『조선중앙년감』, 2016, 119쪽), 평양강냉이가공공장(『조선중앙년감』, 2016, 200쪽), 청성제약종합공장(『조선중앙년감』, 2016, 211쪽), 평양메기공장(『조선중앙년감』, 2016, 222쪽),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조선중앙년감』, 2016, 226쪽),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조선중앙년감』, 2016, 229쪽), 5월9일메기공장(『조선중앙년감』, 2016, 240쪽).

심으로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인민들은 그것을 조선돈으로 구매하였다. 그 차액은 무역총상사의 경상비에 포함시켰다. 국가부담으로 인민들의 당면한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중략) …개업당시 국산품과 수입품의 비율은 4대6이었다. 개업후 상업중심의 경영과 봉사방식에도 변화가 일었다. 현재 국산품과 수입품의 비율은 7대3이다. 나라의 전반적경제가 활성화되고 개건현대화된 경공업공장들에서 각종 제품들이 쏟아져나온 결과다.⁴²⁾

위의 조선신보의 보도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광복지구상업중심에서 판매되는 북한산과 외국산의 제품의 비율이 2011년 12월 개점 당시 4 : 6 이었던 것이 2018년 1월 현재 7 : 3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이다. 광복지구상업중심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제품들을 조선대성무역총상사가 외국에서 외국돈을 주고 수입하고 그것들을 광복지구상업중심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는 북한 돈으로 한다. 여기서 환율에 의한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무역총상사의 경상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국가가 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산 제품의 비율을 하향조정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광복지구상업중심이 북한의 대표적인 쇼핑센터임을 고려한다면, 외국산에 비해 질적으로 현저히 떨어지는 북한산 제품을 외국산과 같이 놓고 팔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한산과 외국산의 제품 비율이 7 : 3으로 바뀐 것은 국가의 부담이 커진 것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산 제품이 2011년 12월 개점

42) 김지영, “〈만리마의 시대/경제부흥과 생활향상 7〉보다 수준높은 봉사를 위한 백화점들의 경쟁,” 『조선신보』, 2018년 1월 17일. <http://chosonsinbo.com/2018/01/17suk-10/>

당시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은의 국산화 강화 정책은 무시할 수 없는 효과를 현실에서 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될 수 있다.

2018년 현재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 실시된 지 4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갖고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며 정당한 평가는 향후 이것에 대한 더 많은 경험이 축적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치밀한 연구들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북한 각 기업체 국가지표의 총합(總合)인 국가예산수입이 2013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⁴³⁾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라는 북한식 개혁개방이 현실에서 일정한 실행가능성(viability)을 갖고 있다는 것을 허위로 일축하기는 어렵다.

5. 나가면서

북한은 경제건설에서 자원부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인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체계’를 도입한다. 그러나 국가의 투자를 중공업에 집중하는 ‘중공업우선’ 전략이

43) 『조선중앙연감』에 발표된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5년도 북한의 국가예산수입은 다음과 같다. “2013년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1.8%로 수행되었으며 그 전 해에 비하여 106%로 장성하였다.” 『조선중앙연감』(2014), 356쪽;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1.6%로 수행되었으며 전 해에 비해 106%로 장성하였다.” 『조선중앙연감』(2015), 308쪽;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1.3%로 수행되었으며 전 해에 비하여 105%로 장성하였다.” 『조선중앙연감』(2016), 422쪽.

지속되면서 자원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되었고 경제건설을 정상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독립채산제에 바탕을 둔 연합기업소를 산업전반에 도입하였으며 소위 ‘경공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경공업활성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대처하였다. 이 ‘경공업혁명’은 내용적으로 각 지역, 지방에서 그 지역과 지방의 자체적인 원료와 자재 그리고 유희노동을 활용하여 중소규모의 경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8월3일인민소비품증산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연합기업소를 산업전반에 도입하면서 중앙집권적 계획체계는 이완되게 되었으며 전국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중소규모의 경공업공장들은 중앙계획 통제의 밖에서 운영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비(非)계획부분이 경제에서 확대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게 된다.

‘고난의 행군’ 기간 중 북한의 경제운영체계는 일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폐쇄되었던 연합기업소체계가 더욱 강화된 독립채산제의 토대위에서 2001년부터 재개되었다. 다시 재개된 연합기업소체계가 이전의 연합기업소체계와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집단주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영에서 기업의 책임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기업소와 근로자들의 물질적 동기가 동시에 높아졌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보다 정형화되어 북한식 독특한 사회주의경제체제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서 북한의 기업체는 자본주의하의 일반 기업과 유사한 동기와 경영전략을 갖고 있으나 기업체

는 기업체안의 조직되어 있는 기업체당위원회의 지도를 받고 이 제도화된 지도의 기본 요지(bottom line)는 국가의 이익을 먼저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에서 영리를 주목적으로 자유방임의 틀에서 운영되는 기업과는 구분이 되며 여전히 집단주의의 틀에서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김정일이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하는 것을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종자’⁴⁴⁾로 정해 준 것을 바탕으로 진화하여 온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2018년) 현 모습이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아직 진화중이지만, 북한의 자력갱생노선에 큰 변화가 없고 북한이 자력갱생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고히 고수하면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밑에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북한의 독특한 사회주의경제체제는 고수,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접수: 5월 16일 / 수정: 8월 3일 / 채택: 8월 7일

44) 리영민,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 41쪽.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김일성저작집』, 1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김일성저작집』, 2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_____, 『김일성저작집』, 3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_____, 『김일성저작집』, 3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_____, 『김일성저작집』, 3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김일성저작집』, 3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김일성저작집』, 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_____, 『김일성저작집』, 4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김정일, 『김정일선집(증보판)』, 1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_____, 『김정일선집(증보판)』, 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_____, 『김정일선집(증보판)』, 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_____, 『김정일선집(증보판)』, 2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조선중앙년감』(평양: 평양중앙통신사, 2013~2016).

2) 논문

- 김철식, “우리 나라 연합기업소는 사회주의기업소조직의 새로운 형태,” 『근로자』, 2호(1985).
김철웅, “당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는것은 당조직들의 첫째가는 임무,” 『근로자』, 3호(2011).
리영근,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변수입을 늘이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1호(2003).
리영민,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 『근로자』, 9호(2014).
장성은, “공장, 기업소에서 변수입의 본질과 그 분배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경제연구』, 4호(2002).

한인호,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창발성의 옳은 결합,”

『근로자』, 5호(1986).

3) 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하

신 보고,” 『로동신문』, 2013년 4월 1일.

4) 기타 자료

김영홍,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2016년 11월 4일. <http://www.ryongnamsan.edu.kp/univ/success/social/part/814>.

김지영, “<관리마의 시대/경제부흥과 생활향상 7>보다 수준높은 봉사를 위한 백

화점들의 경쟁,” 『조선신보』, 2018년 1월 17일. <http://chosonsinbo.com/2018/01/17suk-10/>.

_____, “<인터뷰>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김철소장: 조선이 쇠퇴가 아닌 상승의 길

을 걷는 이유,” 『조선신보』, 2018년 1월 5일. <http://chosonsinbo.com/2018/01/27suk-8/>.

2. 국내 자료

1) 단행본

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서울: 통일원, 1986).

2) 기타 자료

심새롬, “대북 제재에도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3.9%로 17년 만에 최고,” 『중앙

일보』, 2017년 7월 21일. <http://news.joins.com/article/21777887>.

The Evolution of North Korean Socialist Economic System: From Centrally Planned System to th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System”

Phillip H. Park(Kyungnam University)

As the problem of resource shortage becomes serious, the DPRK introduced the centralized planning system called “Unified and Detailed System,” in the economic construc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However, as the “Giving Priority to Heavy Industry” strategy of concentrating national investment in heavy industries was continued, the resource shortage worsened further, and consequently the economic construction went off the track. In order to put this on the right track, the DPRK introduced the “Ryŏnhapkiŏpso” system based on the “Independent Accounting System” to the whole industry and tried to accelerate consumer productions by initiating the “Revolution on Light Industry.” Amid such circumstances, the DPRK faced the biggest economic crisis called “Arduous March,” as the Soviet Union and

socialist economic cooperation bloc collapsed. During the “Arduous March” period, the DPRK’s economic management system underwent major changes. After the “Arduous March,”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was reestablished with uniquely North Korean characteristic, called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System.” Under this system North Korean enterprises have similar motivation and management strategy as any enterprise in the capitalist system. However, as North Korean enterprises are guided by Enterprise Party Committees whose priority is to give benefit to the State,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enterprises under capitalist system whose priority is to maximizing its own benefit. As such, it can be concluded that North Korean enterprises are still operated under the collectivism.

Keywords: Centrally Planned Economic System, Accumulation and Distribution, Ryonhap Industrial Complex, Self-Reliance, Socialist Enterprise Responsibility Management System